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 분열 조짐... 당내 자성론 고개

당권 경쟁 과열되며 갈등 심화
“계파 갈등 아닌 ‘통합 전대’ 돼야”
이광재·박지원·우원식 한목소리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정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던 민주당이 내부 경쟁으로 흔들리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당내 갈등을 꼽으며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 되겠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이 당내 갈등에 우려를 표하자, 이후 중진의원들이 연이어 자제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이번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복귀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황명선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분열과 갈등에 큰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정책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며 “당이 하나 되는 통합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 전당대회 시대를 청산하자.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짝을 지어 싸우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도 이날 SNS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조탈래유’, ‘새똥 돼주길’ 등 상대를 비하하는 자극적인 멸칭이 확산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정치는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데, 혐오의 언어가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비하와 조롱, 혐오는 당의 단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남 부의장은 “(전당대회는) 멸칭보다는 비전과 정책이, 분열보다는 통합의 장이 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멸칭을 중단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 창출에 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한 방송에서 “전당대회 분위기에 대해 저는 굉장히 염려한다. 제발 싸우지 말자”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에서) ‘문조탈래유’ 등 별 게 다 나오지 않느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서민들 경제 대책을 세우고 개혁을 완료해야 하는데 당에서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쓴소리를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전날(21일) 자신의 SNS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면서 “평생을 민주당의 당인으로, 현장에서 ‘을’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갈등이 심화되자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우 전 의장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고, 흠집을 잡고, 분열을 키우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거나 하면 그다음에 우리 당에는 무엇이 남는 것인가”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멸칭들이 내부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文정부 수사 검사가 민정수석... 여권 ‘시끌’ 장동혁 병상 공백 속 국민의힘 내홍 격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 이력
청와대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또다시 검찰 고위직 출신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여권 지지층에서 비판이 나온다. 한찬식 선임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거느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보원수사권 문제를 다룬 2단계 검찰개혁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인선으로 인해 충돌이 커질 우려가 나온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1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논란을 빚는 건 민정수석이다. 새로 임명된 한찬식 수석(사진)은 검찰에서 27년 넘게 근무했고,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인권국장, 울산·수원·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2022년 8월부터는 김연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제는 한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4월까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다.



신임 민정수석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당시 수사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주임 검사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정 2년 차 공식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계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강성 당원 사이에서는 한 수석 임명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과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혁신당은 21일 한 수석 임명 직후 논평에서 “검사 보원수사권과 전간송치주의 문제를 다룬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한 수석 임명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국정 목표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보고 이 또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수석은 27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사법개혁과 실용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노선을 잘 구현할 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한 수석 인선에 대한 당 지지층 일각의 반발을 두고는 “통상 인사 개편이 있으면 이런저런 의견이 회자가 된다”며 말을 아꼈다. /서예진 기자

비당권파·쇄신파, ‘시간끌기’ 비판

과로로 집거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로 입원 5일차를 맞았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단식 및 지방선거 이후 올림피아공원 시위 참석 등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입원하면서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 비당권파·쇄신파들은 거취 결정 없이 두문불출하는 장 대표를 두고 ‘시간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이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밝힌 바로는 장 대표는 조속한 당무복귀를 위해 의료진과 협의했지만, 퇴원을 하지 못했다.

박 비서실장은 “당 대표께서는 조속한 당무복귀를 위해 오늘 의료진과 협의했지만, ‘당분간 더 치료를 이어가는 게 맞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오늘은 퇴원을 못하게 됐다”며 “당무복귀 시점은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장 대표가 없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또 한 번 당대표의 거취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정당에서 당 대표가 반복적으로 교체됐던 점을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생각의 깊이가 부족하고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급급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정치자영업자들이 당 대표를 흔들기 시작한다”면서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당 대표를 무책임하게 끌어내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설전이 벌어지는 데 대해 “과거에 얽매어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따지면서 서로의 공로와 책임을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우리 최고위도 변화와 쇄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빠져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1일) 당에서 배포된 보도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당 명의로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결과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를 비교하며, 장 대표 체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밝혔다. 2018년 7회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초기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제주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압승을 한 바 있다. 2018년과 이번 선거가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이번에 더 많은 승리를 거뒀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압승한 8회(2022년) 지방선거와는 비교하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자료에는 “장동혁 당 대표는 선대위 출범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는 표현이 담겨 논란이 벌어졌다. 장 대표가 거취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사무처에서 이 같은 자료를 내 ‘지원사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한 방송에서 해당 보도자료를 비판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한 데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지지율 46.7%...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

지지율 6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46.7%,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9.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리얼미터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했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8%p 하락해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으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해 최저치를 나타

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포인트(p) 상승하며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부정 평가가 긍정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9.9%p ↓)과 인천·경기(7.6%p ↓), 경기·인천(7.6%p ↓), 서울(7.4%p ↓), 광주·전라(1.8%p ↓), 남성(6.2%p ↓), 여성(3.4%p ↓), 50대(9.1%p ↓), 20대(6.2%p ↓), 40대(5.5%p ↓), 30대(2.4%p ↓), 60대(2.4%p ↓), 70대 이상(2.1%p ↓), 중도층(4.9%p ↓), 진보층(3.2%p ↓) 등에서 하락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면서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